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 시 : 2006. 3. 28(화) 오전 11시00분

● 장 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참여광장)

사 회 : 박상우(공동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장)

개 회

인사말

이상덕(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참석자 소개

결성 취지 및 경과보고

송인준(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2006지방선거대전연대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설명

박정현(공동집행위원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2006지방선거대전연대 출범 선언문 낭독

김경희(공동대표,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질의응답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회의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

전화: 042-331-0092 / 전송: 042-252-6976 / 전자우편: chamngo@empal.com

[전국 연락처]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 T:02-754-7891 / F:02-774-8889 / <http://vote.humanbelt.net>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결성 취지 및 경과보고

1. 결성 취지

1) 2006년 5.31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치루어 진다는 점에서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비전과 개혁방향, 그리고 이를 실천할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을 확정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소중한 선거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참여정부 중후반 평가라는 성격과 함께 지방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면서 향후 2007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531지방선거는 중앙당 중심,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심,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 풍토 속에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중심이 아닌 전국적, 중앙당파적 경쟁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지역감정 선동이나 지역개발 성장주의 경쟁의 가속화로 지역내 다수의 이익과 갈등이 중심이 아니라 토호 기득권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531지방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기성 거대정당 중심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러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참여에 의거한 후보 선출보다는 정당내 기득권 집단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한편으로 소수 신진세력의 진입은 어려워질 것이다.

4) 시민사회운동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0년과 2004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역적 상황의 편차와 각 단체의 여건 차이로 인해 통일적인 지방선거 전국 대응방침이 합의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후보자 중심의 선거구도, 지지 또는 당선운동, 낙선운동 실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혼란을 겪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역적 편차와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그 한계가 분명하고 효과적인 개입 수단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5) 하지만 지방자치 10년을 넘어선 지금 지역에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앙정치인을 뽑는 것만큼 중요한 것임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21일 전국 264개 단체가 모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적 대응기구 결성을 위해 노력해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2006지방선거대전연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어 후보의 당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어

렵다 하더라도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국적인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 축소, 환경 훼손 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의 확대를 위한 공동대응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6) 2006지방선거대전연대는 우선 전국적으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서 전개할 중앙당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요구와 검증사업에 동참할 것이다. 동시에 대전지역의 신성장주의를 반대하고 유권자 직접 질의운동과 결합하여 고용, 보육, 교육, 노인 문제 등 주민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 사안의 정책공약과 이행가능성 검증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성과 지역현안 중심의 정책선거를 추구하고 검증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후보들의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살피고 예산 등의 실천가능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헛공약 여부를 가려내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 등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거참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추진경과 (전국/지역)

- 2005. 8. 23 2006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대전지역 시민운동가 토론회 개최
 -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평가방안 및 신성장주의 반대 운동의 필요성 공유
- 2005. 9. 2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6지방선거 대책 후속모임 개최
- 2005.12. 2~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대회 및 지방선거 대응 워크숍 개최
- 2006. 1. 12 2006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차 간담회 개최
 -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에 동의하고, 주요의제 요구 및 개발공약 재원 등 공약검증 필요성 제기
- 2006. 2. 1 2006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차 간담회 개최
- 2006. 2. 8 2006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개간담회 개최
 - 지역별 지방선거대응 상황공유 및 2006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 결성 결의
- 2006. 2. 24 (가칭)2006지방선거시민연대 1차 준비위원회 개최
- 2006. 2. 27 2006지방선거와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공동워크숍 개최
- 2006. 3. 8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2차 준비위원회 개최
 - 주민자치 6대 입법과제 토의 및 확정, 국민정책제안대회 및 헛공약감시운동 계획 확정
- 2006. 3. 1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단회의 및 지방선거대책기구 결성 논의
 - (가칭)2006지방선거대전연대 결성을 제안기로 함.
- 2006. 3. 15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3차 준비위원회 개최
 - 참가단체 확정 및 주요 조직인선안 확정
- 2006. 3. 21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 개최
- 2006. 3. 21 (가칭)2006지방선거대전연대 결성 준비모임 개최
 - 2006지방선거대전연대 사업계획안 및 조직구성안 점검, 3월 28일 출범 기자회견 날짜 확정
- 2006. 3. 28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결성 대표자회의 및 출범 기자회견 개최
 - 명칭 및 참가단체 확정, 주요사업계획 및 조직인선안 확정후 출범 선언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1. 조직구성

1) 명칭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로 칭함.

2) 참가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문화연대
- 대전여민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전홍사단
-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3) 조직구성

○ 대표자회의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책임대표자들로 구성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전국대표자회의 파견 대표 :

○ 공동대표단

- 김경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 김규복(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상임공동대표
- 김선건(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 문상원(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송인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 조연상(대전경실련 공동대표)
- 차재영(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진연(대전여민회 사무처장)

-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인세(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국장)
- (대전문화연대)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전국 상임집행위원장 파견 : 김제선 사무처장

○ 자문교수단

- 정책제안, 헛공약 검증 등 유권자 운동의 이론적 근거 제공 및 자문
- 대전시 및 각 구별로 관련분야 교수 및 학술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실무활동가 중심으로 구성

○ 유권자위원회(시민평가단)

- 대전시 및 각 자치구별 주민이 요구하는 정책제안운동의 중심 주체로 활동
- 필요에 따라 각종 정책제안사업과 헛공약 감시 사업의 심의를 담당
- 대전시 및 각 자치구별로 50명 내외의 유권자를 중심으로 구성

○ 정책자문 연석회의

- 정책검증 방안 토론회 및 합동평가
- 대전시 및 각 자치구별로 구성된 자문교수단 및 유권자위원회(시민평가단) 등으로 통합 운영

○ 특별활동기구

- 2006지방선거보도시민감시단 : 추후 구성하여 운영
 -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은 대전충남민언론에서 담당기로 함.

○ 사무처

- 공동사무처장
 - 박상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
- 실무담당자 및 파견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 대전문화연대	•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 대전여민회	•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홍사단	•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참가단체의 실무담당자로 사무처를 구성.
원칙적으로 단체별로 1인의 활동가를 파견하되 상근여부는 상황을 보아 판단하기로 함.

사무국은 환경운동연합 2층 환경교육센터에 둔다.

○ 전국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의 관계

- 중앙의 지방선거연대와 목표와 기본방침을 공유하되
활동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과 형편에 맞게 전개기로 함.

○ 회비 및 재정

- 원칙적으로 각 단체별 분담금으로 충당

※ 대전시 및 각 자치구별 주무단체 및 협력단체(경선감시, 공약검증, 후보자초청토론회 등 추진)

	주무단체	협력단체	비고
대전시	대전참여자치연대		
동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중구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문화연대	
서구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민언련	
유성구	대전YMCA	대전홍사단	
대덕구	대전외노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	
공약요구사업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주요의제 선정
주민정책제안운동	*대전YMCA		주민정책제안질의
선거보도감시운동	*대전충남민언련		

2. 사업계획

1) 주요사업과제

- 경선감시 활동 및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 지역 집중의제 요구운동
- 주민참여 정책제안 질의 운동
- 공약검증운동 및 후보자초청토론회
- 기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전국 연대사업

2) 주요사업계획

- 2006지방선거대전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06. 3. 28(화) 오전 11시
 - 장소 :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
- 경선감시 활동 및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 일시 : 3월 하반기 ~ 선거일
- 목적 : 지방선거 경선의 불법 탈법 감시 및 부적격자 정보공개, 후보자 질의 사이트 운영
- 계획
 - a) 경선 감시단 구성 : 각 선거구별 참가단체 회원으로 구성
 - b) 제보 전화 개설 : 경선 모니터 및 불·탈법 경선 제보접수 및 대응
 - c)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 각 후보자의 부적격 사항 정보공개
 - d) 홈페이지상 후보자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질의 코너 개설

○ 대전지역 집중의제 요구운동

- 일시 : 3월 하순 ~ 4월 하순
- 목적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의제가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부상시키기 위함
- 계획
 - a) 전국적으로는 자치, 복지, 생태, 문화 각 분야의 핵심 5대 과제 선정, 동시 발표
 - b) 지역적으로는 고용, 교육, 노인, 교통, 주택, 환경, 문화 등 핵심 요구과제 선정 발표
 - c) 기자회견, 온라인홍보와 정당 지역대표자 및 지방선거 책임자 면담
 - d) 주민참여정책제안운동 및 후보자초청토론회와 연계하여 추진

※대전지역 주요 의제 개발을 위한 정책워크숍

- 일시 : 4월 초순경
- 장소 : 충청하나은행 강당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정현안 토론회로 개최

○ 주민참여 정책제안 질의 운동

- 일시 : 4월 초순 ~ 5월말
- 목적 : 지방선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마련하여 실제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후보자에게 강제하는 동시에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이를 전달하는 사이트 운영
- 계획
 - a) 주민참여 공약제안 질의 운동 : “지역을 바꾸는 무지개 희망”
 -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
 - 자치구별 유권자위원회 주민이 원하는 공약 개발 및 제안운동
 - 인터넷을 통한 릴레이 정책제안
 - 어린이도서관, 도시녹지율, 장애인 이동예산 등 주민 실생활과 연관된 공약 제안
 - 규격엽서 및 인터넷을 통한 질의 및 답변 요구
 - b) 막개발 공약 Best 5 / 좋은 공약 Best 5 발표

○ 공약검증운동

- 일시 : 4월 중순 ~ 5월
- 목적 : 각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및 무분별한 개발공약 검증을 통한 후보선별기회 제공
- 계획
 - a) 매니페스토 협약
 - 공약을 매니페스토로 해줄 것을 각 정당에게 요구하고 후보자와 협약
 - b) 매니페스토의 공약검증운동
 - 공약검증사업의 대상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전개
 - 자문교수단 및 유권자위원회(시민평가단) 구성 : 정책검증방안 토론회 등 개최
 - 공약의 적실성을 평가하여 베스트 공약 발표(단, 후보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아니함)
 - 공약의 예산조달, 집행계획, 경제효과 등을 통해 헛공약 선정 발표
 - 각 후보별 헛공약 비율 등 비교로 후보간 변별력 확보
 - 개발공약 총량 검증사업 및 각 공약별 비율 분석 비교
- 후보자초청토론회
 - 일시 : 5월 중순 ~ 법정선거운동기간
 - 목적 : 후보자의 정치적 비전과 쟁점정책 및 공약의 적실성 검증
 - 계획
 - a) 방송사(공중파, 케이블방송) 및 언론사와의 공동기획
 - b) 광역단체장 및 5개구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주문단체가 주관
 - c) 토론방식 : 요구공약 및 질문서 사전 발송 형태로 쟁점 토론회
- 인터넷 캠페인
 - 일시 : 4월 초순 ~ 5월말
 - 목적 : 531지방선거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 유도도 분노나 실망의 자극보다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함. 정치적이슈를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와 삶의 문제로 접근
 - 계획
 - a) 지방선거대전연대 홈페이지 구축 -> 배너 인터넷 신문사 등과 공동기획
 - b)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 네티즌들의 제보들을 통해 공약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 : 직접 찍은 사진 등 적극활용
 - 아름다운 공약, 황당한 공약, 멋진 공약, 불가능한 공약 등으로 세분화
 - 네티즌 제보 :
 - 올려진 각 공약에 대한 네티즌 투표 작업
 - '널리 전파해야 할 공약' 10가지 선정 등
 - c) 젊은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운동을 인터넷 상에서 전개
- 기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전국 연대사업
 - 일시 : 선거기간 내내

- 주요내용

- a) 주민 삶의 질 4대 의제(자차-생태-문화-복지 등) 정책제안 발표
- b) 온라인, 오프라인 주민정책제안운동
- c) 공약평가 및 헛공약 감시운동
- d) 6대 입법과제 제시 및 질의서 발송과 정당 대표자 면담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 지방자치 4대 의제 제개정운동
 -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
 -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 조정을 통한 게리멘더링 방지활동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헛공약은 이제 그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나서야한다.

지방자치 10여년! 풀뿌리 민주주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과 과정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생활의 문제를 지방정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 등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통제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 무용론'이 심심찮게 제기될 정도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행정구역개편 논의나 정당공천제 도입 등 중앙권력은 여전히 지방자치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당들은 지역 토호들을 앞세워 지역사회에서 대표인양 행세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 지역개발과 성장이라는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별다른 제도적 견제장치없이 지방토호와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적 기반만 강화시켜줌으로써 시민사회와 지방 토호세력간의 불가피한 대립이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소송, 주민투표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일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중앙정치권의 보수적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효성 또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척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의 손으로 지역의 정치일꾼을 뽑아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을 띠면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아닌 중앙당파적 정쟁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또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지역감정 선동과, 지역개발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 토호나 소수 기득권층 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 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성 거대 정당 중심의 대전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의 러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에 의거한 후보 선출보다는 정당내 기득권 집단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한편으로 소수 신진 세력의 진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우리는 다가오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두움을 힘차게 몰아내고 진전된 의미로서의 지방정치 개혁과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 유권자 축제의 장으로서 선거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개발공약

이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 만한 정책들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경선과정의 불법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부적격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보공개운동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공약개발 및 제안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며, 고용, 교육, 노인, 교통, 주택, 환경,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공약 총량 검증 등 후보들의 반자치적, 반환경적, 반문화적 헛공약을 감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매니페스트를 통해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예산조달에서부터 집행계획까지의 이행가능성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후보간 변별력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 의제들에 대한 제개정 등 주민참정제도의 완비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조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선거연대기구와의 연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참가단체 일동